

2019년 정세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 건설로

일시: 2019년 1월 13일(일) 오후 2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사회 김형계(노동전선 대표)

발제 1 양동규(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2 김하영(노동자연대)

발제 3 이승철(사회변혁노동자당)

주최: 토론회 준비단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 대구민중행동, 평등노동자회, 현대차 금속민투위, 현대차아산민투위, 현대차 남양민투위, 현대차 노동전선(전주), 기아차 노동자의힘, 대전충북 활동가모임, 대우조선 현장중심의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건강보험 현장회, 철도노동자회, 현대차 전주 동지회,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노동자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목차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_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 3

경사노위, 왜 추진되고 무엇을 노리나 –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주목하자

_ 이승철 사회변혁노동자당 | 11

2019년 정세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 건설로

_ 김태균 노동전선 | 20

부록

[공동성명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 투쟁에 힘써야 한다 | 29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 | 31

[공동입장문] 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 33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1.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환경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지난 몇 년간 잘나가는 것으로 인식됐던 미국 경제를 포함해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하강하고 있다. 최근 얼마 동안의 미국 경제 회복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아니고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각국 정부들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이런저런 정책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 세계적인 이윤율이 회복되지 못한 탓에, 경기가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듯하다가도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또, 낮은 이윤율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저금리 같은 경기부양책으로) 부채를 증대시킨 결과, 세계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신흥국 위기와 금융 불안정: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증대해 온 신흥국들은 세계경제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더 격심한 외환 위기를 연쇄적으로 겪을 수 있다. 1997년에도 타이 바트화 폭락을 시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현재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 인도 등이 위험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위기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신흥국들에서 끝나지 않고 신흥국에 돈을 빌려준 선진국으로 번질 수 있다.

2)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경착륙 우려: 중국 경제가 급속히 둔화하고 있다. 1월 6일자 <뉴욕타임스>는 “글로벌 경제의 고통이 중국에서 무르익고 있다”고 했다. 중국 경제가 더는 세계경제를 떠받치는 활력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국의 막대한 부채는 세계경제의 위협 요인의 하나다. 중국 부채는 지난 15년간 15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부채 감축을 시도했던 중국은 성장이 둔화하자 다시 돈을 풀고 있는데, 이는 모순을 키울 뿐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경우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3) 미중 무역전쟁: 이번 세계 경기 하강 속에서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무역 협정을 재조정하고 있는데, 일종의 ‘근린공핍화(이웃나라 거리 만들기)’ 정책이다. 다른 나라 경제의 희생 위에서 자국 번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낮아진 세계적 이윤율 속에서 조

금이라도 이윤을 더 차지하려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은 단지 무역적자 해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첨단산업 성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중국제조 2025”)을 중단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경제적 의미로 보나 군사적 의미로 보나 중국 정부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 미국 정계에서도 이참에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하므로 미중 무역전쟁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전통적인 동맹국들인 독일·일본·한국 등도 향하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미국을 “등쳐먹는다”고 비난한다. 미국의 제일 강대국 지위를 지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은 경제적 경쟁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갈등과 불안정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전진할 것이라는 전망은 희망이 앞선 관측일 것 같다. 북미관계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불안정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본색과 노동 배신 드러나다

위에서 보았듯이,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나빠졌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에서 다룬 세계경제 불안정화 요인들은 하나같이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모두의 둔화, 중·미 간 무역 갈등의 심화 등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퍼센트 관세 폭탄을 부과하거나, 신흥국들이 더 심각한 연쇄 외환위기에 빠지거나,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경우에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막대할 것이다.

이처럼 성장률이 둔화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한 데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기업 투자에 도움을 주려고 친기업 행보를 더 노골화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스스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이자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 불렀던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켰다. 10월에는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서 기업들에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도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거듭 밝혔고, 2019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도 이 점을 재확인했다. 혁신,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 등이 규제 완화의 명분이 되고 있다.

“노동 존중” 하겠다며 제시했던 노동정책들은 후퇴했거나, 실체가 드러나면서 실망과 배신감을 줬다.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를 선언하고, 산입범위 확대 법제화부터 결정구조 이원화까지 개악을 거듭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전환 제외, 자회사 상용직 전환 방식, 전환자 노동조건 개선 미비 등으로 엄청난 불만과 만만치 않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노동기본권 문제조차 문재인 정부 3분의 1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그럴듯한 말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이 지난 반년 새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드러났다.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상은 문재인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 줬다. 제조업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꾀찮은 일자리에서 쫓아내고 있음을 보여 줬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설파했지만, 소비 증가가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이론이 틀렸음은 제쳐두고라도(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과소소비 때문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이윤율 하락 경향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을 전혀 증대시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말이 아니라) 실천은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포용”, “공정”의 대상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지, 노동자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자본주의 축적의 특정 형태, 즉 박정희식 개발독재에서 찾으면서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비재벌 기업들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에 덜 친화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는 축적 법칙 때문에 자본주의 정부는 친대기업으로 기울게 돼 있다. 김대중 정부도 벤처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도도한 실제 흐름은 자본의 대규모화였다.

3. 올해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거세질 것

한국 자본주의를 효율화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개혁을 제공하기 어렵고 그럴 의사도 없다.

최근 의료영리화나 민영화 추진 뜻을 밝히고, 국민연금 개악안을 내놓은 것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문제로 치환하면서 저임금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일자리 창출의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강요하려 한다. 낮은 수익성에 직면한 사용자들은 임금 억제, 노동비용 감소를 무엇보다 바란다.

2019년에는 이런 정책들이 더 본격화할 것이다. 최저임금 후퇴에 이어 임금체계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직무급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 전환이 그것이다. 직무급제 도입의 주된 목적은 연공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없애 임금 상승 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직무급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 시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다. 무기계약직이 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과 똑같은 호봉제를 원한다.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적용되는 직무급제(임금표준모델)를 서둘러 마련한 것은 기존 정규직과 같은 임금 인상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 격차 해소 방안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있지만, 저질 일자리이자 임금 공격 모델이다. 기존 완성차 노동자 임금의 절반을 주고 소형차 생산 공장을 돌린다는 계획으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려는 정책이다. 올해 정부는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의 확장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연장인 동시에 임금 삭감 공격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실질임금이 약 7퍼센트 감소한다고 계산했다(노동정책이슈페이퍼, 2018. 11. 16).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불만을 자아낼 만한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사회적 대화와 다양한 수준의 교섭에 그들을 참여시켜, 불충분한 개혁 또는 개악에 합의를 이끌어 내어 정당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구상이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아직 민주노총을 참가시키지 못한 데서 잘 드러난다. 물론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지난해 9월 정책대대 유회 이후에도 경사노위 참가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고, 이 의지는 집요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4. 민주노총 집행부가 내놓은 사회대개혁 프로그램의 문제점

촛불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이 촛불의 진보개혁 염원을 저버리면서 그의 지지율은 1년 반만에 두 동강 났다. 그러자 우파가 사기를 회복했고, 공식 정치 영역에서 우파 정당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진보 염원 정서를 가지고 있는 대중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불만을 여야 대결 프레임 안으로 흡수하려 들고 있다. 그러나 애초 문재인 지지율 하락이 진보 염원을 저버린 탓임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대중을 무장해제 시키는 일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추락하면서 공식 정치 영역에서 우파 정당들이 수혜를 얻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 현실의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개혁을 제공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그중 일부는 투쟁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여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적잖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등 노동운동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박근혜 퇴진 투쟁을 통해 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 덕분에,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도 사기 저하되지 않고 저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좌파들은 문재인을 유보 없이 비판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대하려 해야 한다.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을까 봐 노동운동이 문재인 비판을 삼간다면 오히려 우파의 사기 진작을 도울 뿐이다. 노동운동이 문재인을 독자적으로 비판하고 그에 맞서 싸워야 문재인 지지 이탈층의 다수라는 20대 청년층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2019년 계획으로 내놓은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협력(개입)해 사회대개혁을 이룬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사업장 수준의 경제 쟁점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사회와 국가 수준의 변화를 위해 나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추구하는 변화(사회대개혁)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수단으로 그것을 쟁취하느냐다. 김명환 집행부는 이렇게 주장한다. “한국사회 대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과제와 부분적으로 공존한다.” 또, “민주주의 진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진입 과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분적으로 공존한다.” 복지, 민주주의, 평화 문제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재벌체제 개혁”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진보 포퓰리즘, 즉 민중주의의 개혁 프로그램이다. 그 요체는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반재벌(반독점)을 목표로 한중밖에 안 되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모든 계급·계층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요즘 말로는 ‘을들의 연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급을 가로지르는 국민적 연합은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이익을 그 연합에 종속시킨다. 그리하여 아래로부터의 투쟁적 노동운동을 마비시키기 십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인 간의 이해 갈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직후 김대중 정부가 좌파적·전투적 노동운동을 억제한 전략도 민중주의였다.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사회대개혁을 위한 광범한 연대를 추동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체 운동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나 규탄이나를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 실천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 기대와 규탄을 모호하게 흐리는 것은 운동을 확대하는 데 장애가 된다. 온건한 개혁운동가들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공격에 대한 광범한 저항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민주노총의 사회대개혁 안을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5. 경사노위 참가: 소심하고 결함투성이인 전략

김명환 집행부는 또한, “방관보다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경사노위 참가를 강조한다. 대안을 제시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대화 테이블에서 설득해서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위에서 봤듯이, 문재인 정부는 규제완화나 탄력근로제 추진 등에 확고한 본성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압도적인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김명환 집행부는 그동안 노동운동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반대(저지)투쟁 또는 규탄투쟁”만 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쟁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며 불충분했던 게 문제이지, 그 반대는 아니었다.

가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자회사 방안이나 최저임금 개악 문제를 보자. 문재인 정부가 자회사 방안을 강력하게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려면 단위노조 차원의 투쟁에 내맡기지 말고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으로 확대돼야 했다. 노조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잡월드 투쟁을 경사노위 중재에 의존한 것은 문제였다. 그런데도 ‘투쟁해 봤자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이다. 게다가 ‘자회사 방안 반대’가 대안 없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직접 고용이 대안이기 때문이다. ‘자회사 방안 반대’를 대안 부재로 본다면, 그것은 자회사 방안을 일단 수용하고 어떤 자회사인가를 협상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민주노총은 ‘좋은 자회사 방안’에 관해 노정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개악 저지도 대안 부재가 문제는 아니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문재인 후보는 물론 우파 야당들조차 공약한 정책이었다.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를 산업 정책 등 정부 정책에 개입해 사회대개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본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양보 압박을 목적으로 했던 옛 노사정위와는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정부가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국제적 경험을 봐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게 하는 추진력은 언제나 경제 위기였다. 그런 때 정부는 임금과 복지 삭감 등 인기 없는 정책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자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사회적 대화의 추진 목적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 왔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한국 자본주의를 (생산성과 효율 지향적으로) 개혁하는 데 노동자들이 협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첫째, 임금억제 등 조건 삭감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 둘째, 노사갈등을 줄이고 ‘산업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실제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임금 수준이 오르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할 국면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임금 스펙트럼 가운데 중간 어디쯤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노사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면서 계급협조주의를 촉구했다.

국제적으로 보자면, 특히 그 출생지인 유럽에서 사회적 협약은 쇠퇴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노동조합이 협력한 대가로 알량하게나마 복지가 제공됐지만, 1990년대 들어 점점 일방적 양보만 강요됐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협력한 대가가 공공정책 결정에 (별로 영향도 못 미치며) 참여하는 것 정도인 경우도 있었다. 2010년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로는 이마저 후퇴했다.

그래서 보수적 개혁을 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ILO보고서>(2018. 10)조차 이렇게 조언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적 협약 체결에서 한걸음 떨어져서, 대신 조직이나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방어하는 기본적인 노사관계 업무에 그들의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차라리 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친기업·반노동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고, 2월 탄력근로제 강행마저 예고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마땅히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런 개악이 예고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면, 설사 김명환 지도부가 투쟁-대화 병행론에 따라 투쟁 계획을 내놓아도 그 목적이 협상을 위한 압박용임을 아는 조합원들은 투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협상 중인 지도부는 투쟁이 자기 통제 하에 있기를 바라고, 자기 운신의 폭이 줄어들까 봐 대중의 독자적인 운동을 자제시키는 경향이 있다.

민주노총의 일부 중앙집행위원들은 경사노위 조건부 참가를 주장하기도 한다. 탄력근로제 추진 중단, 최저임금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이 그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은 지난 수개월 동안 경사노위 참여 판단의 기준으로 언급돼 왔지만, 바로 그 기간에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며 보란듯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개악을 거듭해 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과 탄력근로제 강행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경사노위 참가를 대가로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무망한 일이다.

게다가 조건부 참가론은 지도부가 싸우겠다는 것인지 경사노위에 들어가려는 것인지 모호해서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다. 김명환 위원장도 처음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의 잣대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노동시간)을 제시했지만, 둘 모두 누더기가 된 상황에서도 노사정대표자회의로 직진했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조건부 참가 입장을 이용해 온갖 책략을 부리면서 노동운동 진영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혼란은 탄력근로제 개악 등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시간을 허비하는 나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투쟁을 해서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다. 경사노위 바깥에서 뒷집지고 있다면 사회적 대화를 내세운 개악을 막을 수 없다. 우리 좌파들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탄력근로제 등 개악에 맞서) 투쟁을 명령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6.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한 좌파의 몫

앞서 지적했듯이, 노동운동은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얻은 자신감 덕분에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절망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경제 위기가 악화하는 조건에서도 올해 노동자 투쟁이 꽤 역동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좌파는 (위에서 다룬 것 외에) 노동자 운동이 전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구실을 해야 한다.

첫째, 우리 좌파는 문재인 정부와 협력(또는 타협)해 사회 개혁을 이룬다는 전략의 비현실성과 치명적 약점을 드러내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운동 내 온건파 지도자들이 개별 투쟁들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광범한 저항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려는 것에 맞서서 그런 확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좌파는 온건파 지도자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운동을 크게 키울 뿐 아니라 좌파의 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 줘야 한다. 단지 온건파들의 배신과 비효과적 전략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지도와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대중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또, 반재벌,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계급을 가로질러 동맹을 추구하는 민중주의에 대해서도 좌파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 경제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특정 조직 형태(재벌체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찾는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한반도 불안정을 미국과 중국 간 제국주의적 갈등 문제로 보는 반제국주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혁)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한 노동자들이 단순히 급진적 노동조합주의로 기울지 않고 좌파적 정치 대안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온건파들은 기업 수준의 경제적 이슈와 사회 대개혁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우리 좌파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만을 정치적 이슈와 연결시켜야 하고, 정치 투쟁에서도 노동자들이 경제 투쟁에서 사용하는 산업적 힘(파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해야 한다.

둘째, 우리 좌파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에 일관되게 나서야 한다. 올해, 특히 조선소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에도 GM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업 구조조정이 있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내쫓고 임금을 삭감했다. 경사노위가 중재한 '성동조선해양 상생 협약'은 2년반 무급휴직에 더해 인수합병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거의 백지 위임에 가까운 희생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의 대응은 너무 미흡했다. 민주노총은 '좀더 지켜보자'면서 정부에 맞선 투쟁을 피한 채 시간을 허비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직면한 경우, 노동운동 좌파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하라는 것이다. 공장폐쇄나 대량해고가 예고될 때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해당 기업의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퍼뜨린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실제로, 많은 정부들이 전면적인 불황을 막고자 경제에 개입했고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런 돈을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쓰라고 해야 한다.

셋째, 우리 좌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방어해야 한다. 노동운동 내 온건파들은 민간부문 정규직 노동자들, 공공부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임금도 높으며, 이들의 노동조건 방어 노력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 또, 이런 투쟁은 임금 격차만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오히려 격차 축소를 위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심지어 임금을 양보하고 노동이사제나 경영 참가를 얻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수당 공격과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공격에 직면해 있다. 만일 대공장 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기 조건을 방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다면, 기업과 정부의 각종 삭감 공격을 방관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삭감 공격이 성공하면, 계급간 세력관계가 불리해져서 다른 노동자들도 공격받기가 더 쉽다.

기업과 정부는 대공장 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공무원의 낮은 기본급 인상률(2.6%)을 근거로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거부했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말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 격차 해소

방안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있지만,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임금 삭감 정책일 뿐이다. 노동계급의 가장 잘 조직된 부분들이 양보를 강요받으면서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면, 나머지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기는 더 어렵다. ILO가 지적했듯이, 정규직의 ‘과보호’가 공격받은 곳에서는 한결같이 비정규직의 처지도 더 어려워졌다.

노동운동 좌파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리 좌파는 조직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의 연대를 중시해야 한다. 남녀 노동계급의 단결, 성소수자 방어, 이주노동자와 난민 방어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몰카에 항의하는 대규모 여성 시위(불편한용기)가 벌어졌다. 조직 노동운동은 여성차별에 대한 분노에 공감해 이런 운동을 지지하고, 노동조합 안에서도 임금 차별, 보육시설 제공 등이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급진적 페미니즘이 대유행을 하면서 노동운동 안에서도 ‘여성 대 남성’ 젠더 이분법이 지배적인 경향이 됐다. 노동운동 좌파는 여성 차별과 해방의 문제들을 일부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분리주의적으로 다루도록 놔 둔 채 노조 쟁점들(임금과 노동조건)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남녀 노동계급의 단결을 추구하면서 노동자 투쟁과 차별 반대 투쟁을 하나로 통일시키려 해야 한다.

일자리 부족이 심각해지면 지배자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지난해 가을에는 난민 공격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됐다. 출입국관리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도 더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려할 일은 민주노총 산하 일부 조직이 출입국관리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협조하거나 이주노동자의 현장 출입을 막는 것이다. 고용이 악화되면 이런 일은 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체제의 희생자일 뿐인 이주 노동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체제를 비난해야 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과 반목은 노동자 전체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건설노조가 건설업체와의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공격을 이용하는 것이 심각한 실수인 이유다. 노동운동 좌파는 여기에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인기 없는 주장일지라도,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라고 내국인 노동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운동 좌파는 진보파 노동자들에게 선거 대안을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물론 대중 투쟁을 가장 중시해야 하고, 투쟁을 선거에 종속시켜서는 안 되지만, 선거정치를 간단히 일축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노동운동 내 정치세력들은 후보 단일화 논의를 통해 선거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정의당이 압도적 우위이므로 이런 노력이 (주로 정의당 측의 이해할 만한 무관심으로) 잘 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좌파 선거연합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노동당과 변혁당이 1~2명이라도 후보를 내고 좌파들이 힘을 모아서 반자본주의적 선거운동을 한다면, 진보파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경사노위, 왜 추진되고 무엇을 노리나

–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주목하자

이승철 사회변혁노동자당

1. 경사노위를 둘러싼 최근 노사정의 태도

1) 주요 현황과 입장

– 민주노총은 정책대대 무산 이후 중집 논의 거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참가를 통해 ‘사실상 참가하는 방식’의 활로를 모색하려던 기존 계획에서, ‘정기대의원대회 정면 돌파’로 기조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¹ 민주노총은 올 초 실장단 인사개편에서도 집행부의 사회적 대화 기조를 분명히 했으며, 대의원대회만 성사된다면 참여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집행위 등 상층 의결기구와 현장 조직의 반대 의견은 과잉돼 있고 실제로는 소수라는 인식이 강력하다.

– 정부는 경사노위 ‘개문발차’ 이후 표면적으로는 민주노총의 참여 문제에 다소 거리를 두며 고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집행부와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와 같은 관망적-고압적 자세를 견지하는 데에는 △최근 잇따르는 반노동 정책-법안에 대한 강경한 태도 유지의 필요성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의 참여 결정에 더 높은 가능성을 두는 예측 △한국노총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경사노위 이외의 경로를 통한 노사정 합의주의 관철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ILO협약 인준과 사용자 대항권 연동 논의 △양보를 전제로 한 참여 △투쟁이 아닌 대화 중심의 노사-노동관계 구축 등 현안 관련 입장 및 대원칙을 매우 강한 어조로 밝혔다.

2) 시사점

– 정부는 2019년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재벌의 이윤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악 과정에서 노동의 양보를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경사노위 활용 목적을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며,

1 상임집행위 수준에서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참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나, 이후 중앙집행위에는 경사노위 동향 보고로 대체됐음. 김명환 위원장도 보고에서 “지금은 참여하지 않는 상태”라고 발언.

– 민주노총 집행부는 내용이나 정세적 의미에 중심을 둔 토론보다는, 대의원대회에서의 포퓰리즘에 기댄 안전 처리에 보다 방점을 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 정부의 대화는 항상 목적이 있다

1) 과거 정부의 ‘사회적 대화’ 사용법

– 목적 없는 정치적 대화는 단 하나도 없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문하는 정부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 드러난다. 크던 작던, 혹은 성공 가능성이 높던 낮던, 목적을 가지고 말을 건넨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노사개혁위	노사정위	노사정위	노사정위	경사노위
– 노동법날치기	– 정리해고제 – 파견근로제 – 금융-기업- 공공부문 구조조조정	– 기간제법 제정 – 파견법 개정	– 노동개악 추진	– 탄력근로 확대 –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합의주의 도입	고용 유연화	고용형태 유연화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유연화

–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이후 정부의 성격과 노선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활용돼 왔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로, △일관되게 노동유연화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과 △실사 해당 정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한 법제도 개악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후 이 ‘대화’가 개악의 정당성으로 활용됐다는 점 △자유주의 정부 하에서의 개악추진력이 더 강력했다는 점이다².

– 여기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화’의 목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강제한다. 따라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2) 문재인 정부의 숙제 : 재벌(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한 노동유연화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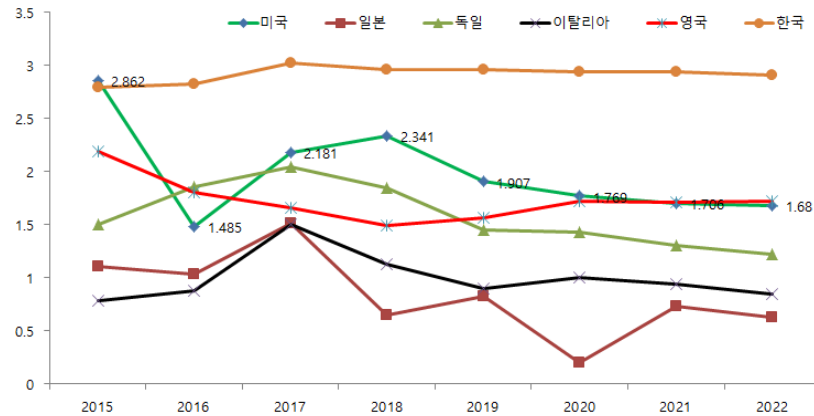
(1) 자본의 불안감 : 장기 저성장과 가동률 하락

– 노동유연화 조치는 국제구제금융 사태와 세계 외환위기, 장기적 수요부진 등 경제위기가 닥치거나, 위기의 징후를 앞두고 희생양이 필요할 때마다 재벌(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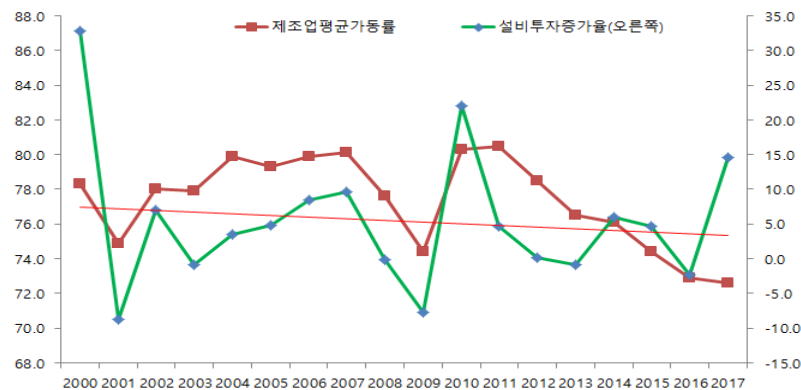
2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또 다른 플랜B도 있어 보인다. 최근 △광주형일자리 논의와 △보건의료노사정TF 합의와 같이, 총연맹을 경유하지 않은 채 산업-지역 차원의 개입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

때로는 구조조정, 때로는 노동유연화의 이름을 달고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의 속제도 이것이다. 한국경제는 2008년 이후 3% 미만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 저성장은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율 하락, 실업률 증가를 불러온다.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이윤율을 보장하기 위한 자본의 조치다.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OECD Economic Outlook(2017.12.)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018. 3.)

– 뉴노멀 현상의 지속과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 저성장 고착화는 ‘좋은 일자리 감소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저성장 국면을 맞아 지속적인 상용 일자리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동시에, 같은 기간 비정규직 일자리가 같은 비중으로 증가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노동유연성 증대〉를 통해 다가올 수 있는 경기 불안에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즉 장기 저성장에 따라 자본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은 정부에 역할을 주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추가적인 노동유연화 확대 조치다.

(2) 〈유연안정성〉 개념과 〈혁신성장론〉의 등장

– 이런 상황에서 정책기조의 극적인 변화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 출범과 함께 (표면적으로나마) 소득

주도성장-노동존중사회를 강조했던 문재인 노동-경제정책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17년 12월에 <2018년 경제정책 방향>³을 발표하며 반전에 들어섰다.

- 이를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기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 △삼성 이재용 석방 등을 거쳐 왔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의 주된 주제는 '규제 완화'다. 2018. 7. 18.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 부문을 선정해 규제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19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으며, 시장과 이해당사자들은 이를 의료민영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 8월7일에는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자리에서 '은산분리 완화'조치를 천명했다. 문재인은 앞으로 이와 같은 규제혁신 현장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친자본 정책방향은 가장 최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 노동정책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변곡점이 드러난 것은 민주노총 2기 직선 임원선거 직후인 지난 2018년 1월이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17년 양대지침 폐기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등 과거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을 지우는 한편, 최저임금-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공약실현 노력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 정책 추진에 치중했지만, 2018년 1월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 출범과 양노총과의 청와대 면담을 기점으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동시에 △이른바 '노동 유연 안정성'을 힘주어 주장하기 시작했다.

- 노동유연안정성의 구체적인 개념이 제시된 바는 없으나, 그 내용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유연안정성은 말 그대로 유연성과 안정성을 합한 개념으로, △자본에게는 고용-해고-임금 관련 유연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고 일부 보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3) 사회적 합의주의의 종착점, <노동유연화 확대-완성>

- <유연안정성> 개념의 핵심은 쉽게 말하면 결국 노동유연성의 확대다. 통상 노동유연성은 △고용 유연성 △고용형태 유연성 △노동시간 유연성 △임금 유연성 등으로 크게 살펴볼 수 있다. 고용 유연성의 경우, 1998년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2005년 '미래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한 홍국생명 판결 이후 사실상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한국의 노동이동률은 OECD 30개 국가 중 최고(2006~2014년)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 근속년수도 두 번째로 짧으며, 5년 이상 근속기간 보장 비중 역시 두 번째로 낮다.

- 고용형태 역시 전체 임금노동자의 과반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며 사실상 상당한 유연화가 완성된 상태이며, 최근 고용둔화 상황을 이용한 제조업에서의 비정규직 대체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임시근로자 비중은 21.7%로, OECD 30개국 중 5위이며,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두 번째로 높다.

3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3대 전략의 첫 번째로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으나,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혁신성장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조성,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공정경제는 갑을관계 개혁,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과 공정·공평과세를 포함했음.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정부의 시장주도(주주 중심) 재벌개혁과 기업 육성, 창업 확산, 자본시장 혁신으로 선회하는 한편, 그간 가장 강조해왔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론은 비중이 축소된 채 병렬적으로 결합된 것을 의미함.

– 이제 남은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도가 등이 보급되면서 이미 길이 열려있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임금유연화의 완성이다.

– 문재인 정부가 ‘문전투’를 내세워 민주노총을 파렴치한으로 몰면서까지 경사노위 참가를 강요하고, 경사노위의 첫 번째 논의과제로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이 거론되고, 같은 시기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⁴ 재벌(자본)의 민원-혹은 명령이 있고, 그 경로가 – 앞선 정부에서 성공한 것과 같이 – 사회적 대화기구에 있기 때문이다.

– 요약하자면 2019년 노정관계를 좌우할 핵심적인 개악 쟁점은, 단연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물론 현 안투쟁은 곳곳에서 이어질 것이나, 정부와 자본 입장에서 법-제도를 사용해 찍어 누를 핵심 의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적용범위가 광활하고, 그만큼 영향력도 크다. 노사간 힘의 관계와 직결된다. 이윤과 직결돼 있기도 하다. 칼을 뽑은 김에 아예 마침표를 찍으면 가장 만족스럽겠지만, 최소한 테이블 위에 올려 공론화를 시작하는 것도 성과라고 여길 것이다. 게다가 임금체계의 경우 입법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사용자에게는 더욱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 재벌(자본)의 역사를 ‘노동법제 개악의 역사’라고 할 때, 바야흐로 또 하나의 큰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셈이다. 그 수레바퀴의 스위치가 있는 곳이 바로 경사노위다. 여기에 제 발로 들어가자는 주장은, 미련하거나 혹은 투항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3. 사회적 합의주의를 거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1) 경사노위는 <공세-쟁취>의 공간이 아니라 <후퇴-양보>의 기구

(1) 사회적 합의주의는 국가가 개입한 노사협조주의

– 사회적 합의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노사협조주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의 투쟁이 폭발하는 시기나 자본의 구조적 위기가 증폭되는 시기,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시기마다 예외 없이 등장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을 ‘노사정 합의사항’이란 틀 속에 가두는 효과를 보여 왔다. 아울러 이에 반발하는 투쟁은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무기로도 활용한다.

(2) 탄력근로’ 입장료 내고, ‘기본권’ 매물로 내놓으라?

– 특히 최근 들어 증폭되고 있는 경사노위 논란은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총론적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유연화 등 노동유연화 완성 목표가 있는 한편, 각론적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 △사용자 대항권 강화의 목표가 있다.

– 일각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기본권(ILO 핵심 협약 비준)을 ‘거래의 핵심’으로 전망하는 이

4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계 및 결정방식이 사실상 사용자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대규모-유노조 사업장 임금체계의 수술일 수밖에 없음. 연공급 중심의 현재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도 자본의 오랜 숙원과제. 정부 역시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최근 일련의 정부주도 직무급제 도입 발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 취임과 동시에 공공부문 성과급제를 폐기한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임금유연화의 형태는 <직무급제> 임금체계 개편이 사실상 유일.

들도 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호의적인 전망이다. 정부와 재벌(자본)에게 이 둘은 별개의 사안이며, 각각 주고 빼앗을 내용이 있다.

	탄력근로제	노동기본권
〈자본〉이 가져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기간 연장⁵ - 취업규칙을 통한 노조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협 유효기간 연장 (2년→3년) - 사업장 점거파업 금지 -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
〈노동〉이 가져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휴가제 도입 - 연장근로수당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

- 즉 정부의 입장은, 탄력근로제 개악을 ‘전제’로 경사노위에 들어오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할 수 있으며, 노사형평과 입법가능성을 위해 사용자 대항권까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의 양보 없는 태도를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하지만 헌법이 정하고 국제기준으로 확립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담긴 사용자 대항권을 인정하라는 논리 자체가 형용모순이며,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기본권은 주고받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정부 신뢰회복은커녕 반노동 행보만 강화

-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이후 지금까지 각종 의결기구 결정을 통해 ‘정부의 신뢰회복 조치 우선’ 원칙과 ‘중층적 교섭구조 실현’ 원칙을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17년 하반기에는 정부 신뢰회복 조치의 그 구체적 방식으로 △(국회 구성에 따른 입법조치 한계를 감안한) 주요 반노동 행정조치 우선 개정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공공부문 산별교섭 우선 실행 등을 제기했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행정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참혹한 중간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⁶, 대표적인 반노동 행정조치였던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협 시정조치 철회 △국가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 정부의 의지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각종

5

현행	정부안	경총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 단위 : 취업규칙 변경 필요 - 3개월 단위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1개월, 3개월→6개월로 단위기간 확대 - 6개월 단위도 취업규칙 변경으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1년 - 근로자대표→부서 대표 - 3개월로 단위 확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을 것

6

2018.4.30 현재	기간제 (단위 : 명)		파견·용역 (단위 : 명)	
	총인원	전환결정규모 (전환율, %)	총인원	전환결정규모 (전환율, %)
	245,826	60,961 (24.8)	169,776	45,784 (27.0)

반노동 행정조치 역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노동시간 관련 대통령 공약(행정해석 폐기 공약) 파기 및 노동계 배제 일방 입법 등, 과거 정부가 보여왔던 반노동 입법에 열중했으며, 이로도 모자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단위 분리 등 심각한 수준의 노동개악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여기에 더해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입법 등 재벌의 숙원사업을 줄줄이 강행한데 이어,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산악 케이블카 허용 등 20여개 규제개혁 리스트를 두고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 이 중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문제는 노동유연화 완성을 위해 노동의 양보를 강요한 대표적 사례다. △적정임금이란 명분으로 ‘2021년 기준 연봉 3,500만원 수준’의 중하위 임금을 적정한 것으로 지표삼고, △기준노동시간 주44시간을 ‘적정 노동시간’으로 수용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며, △노사책임경영은 ‘노조포기’, △원하청 관계 개선은 ‘저임금 수렴과 평균 이상의 노동조건 억제’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의 고용난과 최저임금 상회 수준의 임금욕구를 이용해 정부가 나서 ‘기본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일자리를 얻기 위한 거래의 판돈으로 사용하도록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계기로 ‘기본권 거래’가 현실화 될 경우 △집단 노사관계 측면에서 노동3권이 사실상 해체되고 노조 유인요소를 제거해 노사관계 자체가 더욱 자본 위주로 재편될 위험도 높아지며 △개별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계약관계에서 하위에 처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저임금 수렴 지향의 불공정 계약을 수용토록 강제하게 된다.

– 결국 이 정부는 노정관계 정상화의 출발선인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는커녕, 오히려 반노동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가로막혔던 개악안마저도 ‘촛불 정부’라는 완장을 달고 강행하는 상황에서, 그 경로로 삼고 있는 경사노위 참가는 오히려 민주노조의 발목을 잡게 된다.

3) 기울어진 운동장과 현안투쟁

–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와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투쟁을 분리하며, 현안에서 발생한 갈등이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로 이식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⁷ 애초 ‘원천 분리’ 입장을 가지고 있던 집행부는 이에 대한 비판이 형성되자 2018.3.28. 중집 제출안을 통해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내 특위 구성 또는 별도 트랙의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소 변화했으나,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해법⁸이었다.

–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와, 현안 갈등을 일으키며 노동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는 다른 정부가 아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가 현재의 노동개악 국면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현실 노정관계를 애써 외면하는 ‘정신승리’ 이상이 될 수 없다.

7 이와 같은 전략논의와 현안논의의 분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에 요구했던 핵심 내용이기도 했음. 새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해 왔음.

8 변화된 입장 역시 별도 트랙을 통해 현안 갈등을 논외로 하거나, 혹은 특위 형태를 통해 현안 논의를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의 의제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었음.

- 현안은 단순히 '해결해야 할 성가신 과제'가 아니라, 노정-노사관계의 현실 토대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정책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현안문제 해결은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신뢰회복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노정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으며, 현안문제는 운동장의 기울어진 각도를 드러내는 평형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런 현안문제를 억지로 분리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현안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노-사-정이 공유토록 할 위험이 높으며, 민주노조운동 스스로에게도 상충-현장 분리정립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론] 심지어 '활용론'도 실현될 수 없는 정세

- 설사 '사회적 대화 활용론'에 입각해 사회적 합의주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진영에서조차, 현재 상황에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유럽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사회적 합의주의가 그나마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를 막기 위해서는 ①경제 호황 ②원내 과반 진보정당(혹은 연정) ③진보적 정부 ④높은 노사대표성(높은 노조조직률과 중앙집권적 산별노조 및 사용자단체)의 존재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마저 형해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이는 대화기구에서의 논의(협의) 결과가 정부-자본의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왜곡돼 활용되는 것을 막고, 역으로 대화기구에서의 친노동적 협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객관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적 대화는 노동통제-관리 기구의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한다는 교훈이 형성된 것이다.

- 하지만 현재 한국 상황은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최소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⁹ 정부와 자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조(또는 기존 양대노총)의 대표성을 훼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작으로 계속해 왔으며, 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등 새정부 들어 형성된 쟁점을 다루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한상의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전경련을 대체하는 단체로 '육성'되고 있는 상황이며, 산별노조 역시 전환율은 과거에 비해 높으나 산별교섭의 부진-후퇴 등 악조건 속에 분투하고 있다. 국회 상황이야 두 말할 것이 없다.

- 이런 조건에서 경사노위를 활용해 민주노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0'에 수렴한다. 기계적인 주고받기로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사회적 쟁점화를 위해 논의에만 임하고 합의를 피하는 것이 고작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다. 하지만 사용자 대항권과 같은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자본과 정부 입장에서는 성과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사노위 활용을 통해 입장 관철에 다가서는 것은 자본이다.

4. 경사노위-사회적 합의주의 대응법

1) 내용에 주목하는 대응의 중요성⁹

- 특정 의견그룹에 포괄되지 않는 민주노총 대의원 숫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조직민주주의의 후퇴 속에 선출과정을 거친 대의원도 일부 산별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중소기업 산별 대의원의 경우 사실상 집행부의 임명직이거나 (사업장 대표로) 당연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들의 경우 통상 △(그게 누구든 간에) 현 집행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쟁점에 대한 사전 인지가 충분치 않은 성향을 보이는 반면, 당일 토론되는 내용에 근거해 판단내리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노선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사노위 참가를 추진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과거의 벽제과 프레임)에 치중하기 보다는, △과거 정권에서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결과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 정책 내용 △경사노위에서 추진하려는 새로운 노동개약의 실체 등을 내용적-대중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당일 대의원 발언을 사전 조직-준비(PPT 활용한 발언은 어떨까) 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이며,

- 선전 방식 역시 유인물 배포와 대회장 입구 사우팅 등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 △시각화된 선전 △짧은 영상 상영 등 보다 대중적인 방식으로 '사전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사전 대응과 현장 실천

- 경사노위 참가 여부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되나, 이에 대응하는 과정은 사전에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경사노위 반대의 이유는 단순히 '참여'반대를 넘어 사회적 합의주의와 문제인 정부의 오작동을 바로잡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이런 맥락에서 사전대응과 현장실천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산업별-업종별-지역별-사업장별 대의원 및 활동가 간담회 등을 통해 △경사노위 논의를 통한 노동의 양보가 우리 산업-업종-사업장에 미칠 영향 △정부가 경사노위를 추진하는 진의와 목적 등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도 보다 자신감 있게 문제점을 선전해야 한다.

3) 현안투쟁 단위의 발언력 확대

- 집행부는 현안투쟁과 경사노위 의제를 분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노동정세에 대한 오인이자 추진 과정의 약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안투쟁이 '현실 노정-노사관계의 현주소'란 점을 강조하고, 이들 당사자의 목소리로 폭로-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 △투쟁사업장 연명 유인물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입장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부 노동정책 비판문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징하는 단위의 발언을 별도로 조직할 필요.

9 민주노총 집행부 역시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음.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낮은 노조 조직률, 강력한 진보정당 및 산별노조 부재 등으로 인해 온전한 사회적 대화협과 코프리티즘이 어려운 한국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기업별 노사관계를 넘어 한국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인 초기업 집단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플랫폼' 내지 '지렛대'로 '전술적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전술적 활용은 기구 구성 논의 과정에서 쟁취해야 할 내용을 획득하는 것이 핵심이지, 기구 구성을 위해 조건과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전술적 활용'의 방식이 될 수 없음.

2019년 정세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 건설로

김태균 노동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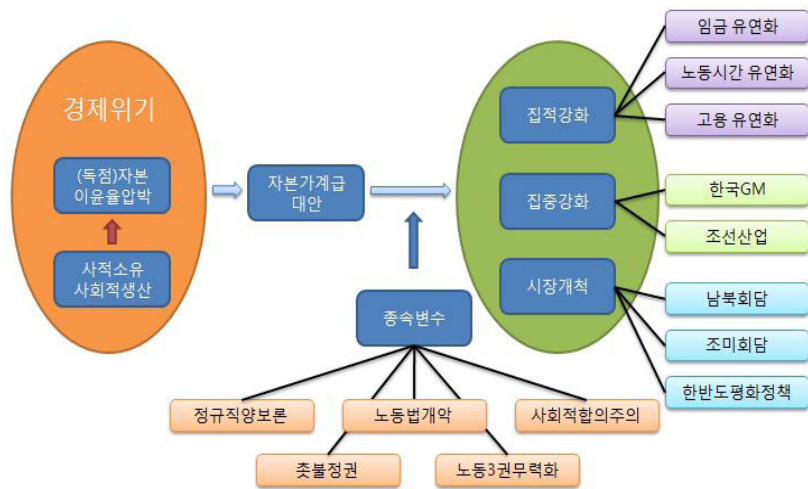
“과학이론은 하나의 지적인 과정으로서 기존의 이론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새로운 설명논리의 확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론은 기존 이론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의 방법론적 전제,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비판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이론은 현실변혁운동의 지침으로 기능한다.”(김동춘, 1997, 현실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 2019년 정세에 대한 분석은 단지 점쟁이 처럼 이것 저것 뜯어 붙여 2019년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2019년 정세를 전망하고 나아가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실천지침을 설정하는 이론적 과정이다. 그리고 또한 지난 2018년 한해를 평가하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를 즉 지양점을 명확히 하는 발전적 실천 작업이다.

－ 2019년 한해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전 지구적으로 휘 몰아 치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해 밑으로부터 이윤율을 압박받고 있는 (독점)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부르주아 계급(문재인 정권)에 맞서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대중을 변혁의 주체로 즉 대중투쟁을 전국적·계급적 투쟁으로 어떻게 조직해 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대립과 전선의 과정이다.(2019년 정세 모형 참조)

－ 본 글은 2019년 정세 관련 변혁적 현장 활동가 진영 내부에서 2019년 올 한해 투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조직하고 투쟁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이다. 물론 곧 이어 보다 넓은 사이즈로 2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여튼 이번 토론회에서의 조그마한 바람은 2109년 정세 관련한 각 조직별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동지적 신뢰를 근거로 공동의 실천을 결의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이 토론자료 또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다

2019년 정세 모형



한다면 토론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믿는다.

1. 성장 둔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한 복판에서 놓여있는 한국 자본주의

2019년 자본주의의 (경제) 전망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2018년 저성장 둔화가 유지를 넘어 확장되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더욱 더 심화 된다는 점이다. 생산의 무 계획(무 정부)성으로 인해 과잉 생산 (생산품의 재고)량의 증가가 지속되고 이를 밑으로부터 압박하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유럽 내부의 영국과 독일 영국과 유럽 대륙 등 국가간의 무역전쟁과 함께 국민국가 수준에서의 보호무역 정책 등이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더욱 더 부채질 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나 무역 의존도가 80%가 넘어¹⁰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로부터 한치도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의 증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내수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위기를 더욱 더 부채질 하고 있는 형국이다.

1)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 저성장과 성장 둔화 요소

2~3%대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던 201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9년도에도 크게 변동없이 유지 또는 감소 될 것으로 각종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

표1) 각 기관이 전망하는 세계 경제성장률					
	OECD	IMF	세계 은행	LG경제연구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년	3.8%	3.7%	3.7%	3.8%	3.7%
19년	3.7%	3.7%	3.7%	3.5%	3.5%

¹⁰ 한국은행은 2017년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을 84%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세계 은행은 2016년과 2017년 한국의 무역 의존도를 80~89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자본가 계급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기관 조차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저 성장의 유지 또는 감소로 장기적 저성장 - 성장 둔화를 예측하고 있다. OECD의 경우 2018년 경제 성장률보다 1% 하락한 3.7%를 전망하고 있으며 그나마 IMF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3.7%대의 경제 성장을 전망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러한 저 성장의 유지 또는 감소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극복은 커녕 더욱 더 감소 될 것이 예상되는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함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움직임, 미국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예고된 금리인상 정책, 유럽과 일본의 저성장 전망 등 저성장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2019년 세계 자본주의를 구출할 그 어떠한 요소도 존재하지 않다고 전망한다는 점이다. 결국 자본가 계급 조차 2018년을 넘어 2019년을 달려가는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가 그 어떠한 인위적 정책으로도 해소 또는 저지를 할수 없을 만큼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점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노동자 계급이다. 자본의 위기이자 자본주의(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자본가 계급의 방안은 위에서 밝혔듯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목줄을 쥐는 것 뿐이다. 바로 이러한 자본가 계급의 위기 탈출 방안으로부터 노동의 위기가 오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 계급의 피와 고통을 요구하는 야만적인 자본가 계급과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상대로 어떠한 투쟁을 국민국가 수준에서 전개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 질서속에서 어떠한 국제적 연대 틀속에서 세계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만들어 갈 것인가는 여전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

2)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민국가 수준에서 경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민국가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자본의 위기 분석을 위한 가동률 및 재고를 등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상태는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실업률 및 고용률과 부채 수준과 물가 등이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데이터는 철저하게 자본가 계급 중심의 데이터이며 그나마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 삶의 정도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국가 수준에서 이를 분석할 노동자 계급의 분석 기관 부재 등으로 인해 자본가 계급의 데이터를 인용하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한국은행이 2018년 10월 제출한 '2018~19년 경제전망'을 보면 한국의 2019년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과 동일하게 2.7%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9년 2.7%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과 근로장려금 확대 및 기초 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재정정책이 전개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한국은행의 한국 자본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말도 안되는 허구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적으로 수출과 소비중 특히 소비가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의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주관적 분석이다.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소득지원 정책과 재정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정책과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확인되었듯이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할 재원이 없어 소비가 축소되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삶의 상태를 인정한다면 얼마나 허구적 분석인지를 알수가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2019년 경제 전망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새빨간 거짓말인가가 아니라 거짓말을 전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7%에 이어 2019년도 2.7%로 저성장이 지속됨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자본가 계급이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어떻

게 인정하고 있는지 조금은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 보고서 국내 경제 현황에서 2019년에 취업자 수는 줄고 소비자 물가는 인상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감이 2018년 2/4분기에 1,010,000명에서 3/4분기에 170,000명으로 줄고 2019년에는 이러한 감소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폭 또한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2018년 2/4분기 1.5%에서 3/4분기 1.6% 인상에 이어 2019년도에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취업자수가 줄어 임금을 받는 노동자 민중의 수는 줄고 먹고 살기 위한 물가는 인상이 되어 2019년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더 황폐화 될 것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황폐화 되는 과정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상황을 보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지난 1998년 IMF 위기때(제조업 평균 가동률 66.8%)와 비슷하게 보였던 2018년 1월~9월까지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72.8%)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 가동률 또한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 자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한 복판에 있음을 자본가 계급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 – 문재인 정권?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로부터 야기된 이윤율에 대한 심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의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독점 자본 살리기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 볼수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노동자가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전취율을 극대화 하는 자본의 집적 방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자본간의 경쟁(인수, 합병)의 과정에서의 적극적 개입이라 할수 있는 자본의 집중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과잉생산되고 있는 생산품에 대한 소비 즉 새로운 자본 시장의 개척이다.

1) 독점 자본 구출 방안으로서의 첫 번째, 자본의 집적

– 임금의 유연화

이윤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자본의 집적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가 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바로 임금 체계의 유연화를 통한 임금삭감 방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임금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의 유연화 방안이며 마지막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보장해 주는 고용의 유연화 방안이다. 문재인 정권의 자본의 집적 방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임금의 유연화는 문재인 정권이 집권 하자마자 진행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악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할증임금을 폐지한 2월 근로기준법 개악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 취업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 최저임금 1만원을 선언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2018년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휴일근로 할증제도를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같은 해 5월 밥 먹는 비용, 상여금 조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시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통해 저 임금을 전제로 한 제도화를 구축했다.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비정규직 없애라고 했더니 자회사를 만들어 직고용 하면 된다고 뻔짓 하는 모습이나 그것도 안된다고 했더니 광주형 일자리나 중규직처럼 원청 직고용은 하지만 임금은 깎아야 겠다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제시 하였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직능, 직급제를 중심으로 한 능력급제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저 임금을 중심으로 한 임금 유연

화 공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

2018년 상반기 임금 관련한 유연화 공세에 이어 문재인 정권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4월 자한당의 발의로부터 시작된 단위시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수차례의 국회 발의의 과정을 거쳤고 급기야 11월 중순 경총이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탄력 근로 시간 확대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총 자본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 의도를 노골화 했다.

－ 고용 유연화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해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선언했지만 최저임금 1만원 포기 선언과 함께 비정규직 고착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족하지만 직고용을 통한 비정규 해소 방안이라는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를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 또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중규직 방식으로의 직고용 형태로 비켜가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 중심의 고용 유연화 공세는 임금삭감,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독점 자본 구출 방안으로서의 두 번째, 자본의 집중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곧 바로 (독점)자본의 이윤율을 압박하는 (독점) 자본의 위기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러한 (독점)자본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축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격화되는 자본의 집적 과정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한축으로는 자본간의 경쟁에서 소자본이 거대 독점자본에게 잡혀 먹는 자본간의 경쟁 즉 집중 과정으로 나타난다. 국경이 의미가 없는 자본, 철저하게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소 자본을 잠식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한국 GM에 대한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과 독점자본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다. 단순히 인수·합병의 과정을 넘어 거대 독점 자본을 중심으로 한 산업 시장 구조조정은 독점 자본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이자 동시에 노동자 계급에게는 살인적인 해고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강요로 나타날 뿐이다.

3) 새로운 자본 시장 – 내수시장의 지리적 연장으로서의 한반도 평화 정책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노동자 계급이 가장 혼란스러워 했던 점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였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혼란과 혼돈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2019년도 계속될 것이다. 당장에 전쟁이라도 날 것 같았던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한 순간에 해소했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 회담은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듯이 노동자 민중을 휘어 감았다. 3회에 걸쳐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1회를 진행한 북미 정상회담은 조선의 핵과 미사일 훈련을 중단 시켰으며 남북과 북미간에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추진되었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으며 한반도 분단 이후 최초의 조선 지도자 방남을 예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 계급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한

반도 평화·정책에 대해 조선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선은 노동신문을 통해 세계 정세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평화와 안전이 위협 당하고 있으며, 동북아 정세는 군사·경제적 대립과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남북 대화만이 한반도 정세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조선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 정책의 한 주체로서의 문재인 정권은 과연 한반도 평화 정책을 취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지금은 비록 물러섰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임종석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노골적으로 조선 땅을 새로운 자본 시장으로 한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정책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저는 자주 지도를 펼쳐 동북아 지역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요녕, 길림, 흑룡강의 동북 3성은 지금 중국 땅이지만, 장차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바다로, 하늘로, 그리고 마침내 육지로 ... 2억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사람이 나가고, 대륙의 에너지망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¹¹⁾”

결국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자본시장 - 내수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3.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촉진시키는 종속 변수

문재인 정권은 경제위기라는 풍랑속에 갇혀 있는 한국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하여 그 대안으로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집적 공세와 함께 독점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및 조선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자본의 집중 과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조선이라는 새로운 자본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독점 자본 구출 작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 투쟁을 무력화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무력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정규직 양보론 이데올로기 공세, 2) 쫓불정권이라는 이미지 정책, 3) 자본의 집적 과정을 법제화 하는 노동법 개악, 4)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 하기 위한 노동3권 무력과 공세, 5)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사노위라 불리는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이다.

1) 정규직 양보론

문재인 정권의 집권 초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비정규 제로 정책’을 선언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삭감을 감내하는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곧

11 최병성 기자, “임종석 ‘남북철도 연결되면 동북3성까지 우리 내수시장 될 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3634>> (2018. 11. 25.)

이어 2017년 3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신 정규직에 대한 각종 보호제도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5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영배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차별은 정규직 강성 노조 탓”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의 유연화 공세에 대해 정규직 양보론으로 화답을 하였다.

흔히 노동개혁으로 포장되는 ‘정규직 양보론’은 ‘정규직 과잉보호로 비정규직 차별이 심해졌다.’로 표현되면서 자본의 집적 공세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촛불정권이라는 이미지 정책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1년여 간의 국정 지지도는 사상 초유인 80% 이상을 보였다. 지금은 비록 50%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역대정권에 비해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상 유례 없는 국정 지지도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이 촛불항쟁의 결과라는 촛불투쟁의 한계로부터 기인한다. 출범 이후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 제로 정책, 소득주도 성장론 등을 주창하면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한 적폐청산 그리고 과감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조미 정상회담 추진 등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인해 촛불정권·민주정권이라는 이미지 정책을 전개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이미지 메이킹은 광폭한 경제 위기에서 독점자본을 구출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 공격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얼굴에 양의 탈을 입히는 메이킹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자본의 집적 과정을 법제화 하는 노동법 개악

4)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 하기 위한 노동3권 무력과 공세,

5)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사노위라 불리는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이다.

한국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노동자 계급의 목줄을 겨누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자본가 계급 구출 방안은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유연화뿐이 아니다. 바로 집권 초기부터 줄기차게 노동자 계급에게 들어오라고 요구해 왔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즉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불리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노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조차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간에 양보하고 취득하는 것인양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무력화 한다는 점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를 통해 확인이 되었듯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에 대한 권리와 집단적 교섭을 할 권리 그리고 파업이라 불리는 투쟁의 권리 즉 노동3권 조차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논의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지난 투쟁의 역사를 통해 노동자 계급이 쟁취한 성과물들을 한 순간에 무(無)로 돌리겠다는 의도 일뿐이다.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합의주의 공세가 노리고 있는 의도는 바로 사회적 합의를 빙자해서 자본가 계급을 구출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법제화를 통해 완성하겠다는 의도이다.

1998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확대를 합의했던 김대중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고용 관계에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시작했다.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은 비정규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무엇을 노리고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20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라 불리는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바로 광주형 일자리와 공공부문 직무급, 성과급제 도입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임금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노동시간에서의 유연화를 법제화 하겠다는 의도이다. 즉 김대중 정권의 비정규를 중심으로 한 고용의 유연화를 법제화 했던 1998년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이어 임금과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법제화 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20년만에 한국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고용과 임금 그리고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완성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노리고 있는 점은 바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이다.

우리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그리고 2006년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면서 투쟁을 교란 시켰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형식으로 1998년 김대중 정권과 2006년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교란시키는 책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나오면서

2019년 정세는 이윤율을 압박받는 독점자본을 구출하고자 자본의 집적과 집중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전개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점 자본 구축 시나리오와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종속변수로서 정규직 양보론 이데올로기 공세, 촛불정권 이미지 메이킹, 노동법 개악, 노동3권 무력화,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전망했다. 자본의 집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 등 노동의 유연화를, 집중은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그리고 3회에 걸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조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책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자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임을 구체화 하였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독점 자본 구축 작전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대중의 상태를 고통으로 내 몰며 이로 인해 노동자 대중 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될 것이다. 문제는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이다. 경제위기 · 공황기 노동자 대중 투쟁의 자발성을 노동해방을 위한 변혁성 · 혁명성으로 전환을 조직해 들어가야 할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의 역할이 노동자 대중 투쟁을 단지 지지 · 엄호할 것인가 아니며 지지 · 엄호를 넘어 노동자 대중 투쟁을 전국적 · 계급적 투쟁으로 조직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주체적 판단이다.

경제위기 · 공황기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노동해방을 위한 전국적 · 계급적 투쟁으로 조직해 들어가자. 이를 위한 조직화의 주체인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의 공동의 실천을 지금부터라도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공동의 실천은 동지적 신뢰를 가져온다. 동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집단적 실천 준비를 통해 다가오는 2019년 격변기를 준비해 들어가자.

부록

[공동성명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 투쟁에 힘써야 한다 | 29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 | 31

[공동입장문] 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 33

공동성명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 투쟁에 힘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공약 후퇴를 거듭하더니 이제 본격적인 우향우 행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 폐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박근혜의 대표적인 노동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조치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치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줬다 뺏은’ 최저임금 개악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저임금 고착화(표준임금제도) 확대에 이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억제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반적인 임금 억제 정책 추진이다. 노후 생계용인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규제 완화 5법 통과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문재인이 ‘박근혜의 대기업 정부 입법’이라며 비난했던 바로 그것이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전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기업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내던져 버리는 것이다. 이 규제 완화 정책 중에는 사회 안전망을 일부 확충하고 노동 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한국형 유연안정 모델’ 추진도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는 깊어 가는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 존중’을 할 여유는 없다며 친기업, 친재벌 신자유주의 정책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명분도 없는 복귀 결정

민주노총이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한 이후 정부가 더 노골적으로 친기업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복귀를 결정한 것은 명분이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여부는 10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복귀와 함께 민주노총이 참가하게 된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이후 그 산하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 논의로 고스란히 이월될 계획이다. 정책대의원대회는 의제별, 업종별 사회적 대화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이월을 승인하는 김 빠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민주노총 중집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복귀를 결정한 이후에도 정부와 여당의 친기업적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이 결정 직후 민주당은 규제완화법 본회의 처리를 보수 야당들과 합의했고, 이정미 의원을 환

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하는 데 앞장섰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부 차관이었던 이재갑을 노동부장관에 지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단시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의 비판을 아랑곳 않고 확고하게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만 해서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 대화와 교섭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들은 사회적 대화와 교섭 자리에서도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거나 양보를 강요하거나 기껏해야 형편없는 안을 들이밀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나쁜 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압박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날짜 박고 합의 압박하는’ 방식을 반대해 왔지만, 정부 여당은 벌써부터 ‘국회 일정을 고려해 노사정이 10월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친기업 정책, 노동조건 공격이나 양보 강요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투쟁뿐이다.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것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조성하고 투쟁 잠재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하반기 투쟁 과제로 제시한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원상회복 등을 쟁취하려면,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어느 때보다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회적 대화 재개가 아니라 투쟁 조직에 온 힘을 쏟을 때다. 이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승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 공세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여야 한다.

2018년 9월 27일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차사), 평등노동자회, 전국노동자정치협회,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노동해방실천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현대차 금속민투위, 현대차 아산민투위, 현대차 남양민투위, 현대차 노동전선(전주), 기아차 금속노동자의힘, 대전충북 활동가모임, 대우조선 현장중심의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기아 더불어한길노 (연명은 무순입니다)

※ 위 내용으로 보름 동안 개인 연명 조직해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전달[민주노총 대의원 100명, 현장 간부 184명, 민주노총 조합원 451명]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

지난 11월 10일 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점증하는 불만은 물론이고 투쟁 의지와 잠재력을 유감 없이 보여 줬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문재인 집권 1년 반 만에 태평로를 뺄곡하게 메웠다.

공약 파기와 후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방귀 편 높이 성내는 격으로 민주노총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일방적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회의론을 확대시킨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정부·여당 자신이다.

줬다 뺏은 최저임금, 자회사 전성시대로 전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때문에 이미 올해 여름 정부에 우호적이던 지식인들조차 “노동자들이 조삼모사 식 정책 행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을 정도다(‘지식인 선언’). 그 뒤로도 정부·여당은 규제 완화법 통과를 강행했다.

지난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유회는 이처럼 노동존중 운운하면서 뒤통수 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하고 김명환 집행부가 굳은 의지를 보였음에도,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사회적 대화 참여에 열의를 내거나 힘을 실어주지 않은 이유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이후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본색의 가속 페달을 더욱 힘껏 밟고 있다. 10월 하순 발표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서 기업들에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또, 11월 초에 정부·여당은 보수 야당들과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이유로 들었다. 원격의료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실사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했더라도 뛰쳐 나와 싸워야 마땅한 일들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국노총 지도부조차 말로나마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이후에도 경사노위 참가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가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콘텐츠 만들어” 내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매일노동뉴스〉).

우선 이것은 정책대의원대회 유회에 반영된 적잖은 조합원들의 정서와 그 정치적 의미를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사무총국 내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돼 왔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파 갈등으로 치부하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적 대화보다 투쟁에 힘을 실으라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반영돼 있다는 점을 김명환 집행부는 무시해선 안 된다.

변화를 반영하는 지도력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다. 김명환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 온 것은 두루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문제인 정부가 양보할 기색은커녕 노동 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에 미련을 두고 투쟁 확대에 미온적이라면 오히려 민주노총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문제인 정부의 우향우는 경제 위기 심화와 고용 사정 악화를 배경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나 광주형 일자리 등과 같은 노동조건 공격을 단호하게 추진할 것임을 뜻한다. 이것은 또한 정부·여당이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 들이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도 뜻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임금 수준이 오르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며 조건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공약 파기와 후퇴, 그리고 노골적인 노동조건 공격을 막으려면 노동운동은 사회적 대화에 기대를 걸지 말고 단호하고 완강하게 투쟁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이 걸린 문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11월 21일 하루 파업을 디딤돌 삼아 투쟁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11월 14일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교찾사), 실천하는 공무원 현장조직

공동입장문

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잇따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19년 경제 정책 방향과 각 부처 업무보고는 마치 친기업 선언과도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는 아예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 경영인들을 앉혀 놓고 진행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규제 완화, 공공시설 민간투자 확대(민영화) 등은 노골적인 이명박근혜 정책의 계승이다.

문재인 정부는 속빈 강정이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마저 내던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가 빨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시장과 민간의 우려를 감안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제갑 노동부 장관도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이를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사용자들의 불만을 수용해,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고 탄력근로 확대 개악을 단행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것이다. 또, 반값 임금에다 노동권도 없는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확대 계획도 내놔다.

스물넷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일터에서 처참하게 죽고 동병상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겠다고 한다. 쫓다 뺏은 최저임금, 엉터리로 전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돼 왔지만,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려는 “현장 목소리”에 노동자들은 없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는 2019년 정책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는 경제 위기와 고용 사정 악화를 배경으로 몇 달 새 급진전돼 왔다. 최저임금 후퇴,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광주형 일자리 추진, 노동권 보장 외면, 국민연금 개악 등은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보다 앞세우겠다는 뜻이다. 촛불에 뒤늦게 올라타 집권해 놓고 이제 촛불 염원을 개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택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우경화와 노동자 공격에 맞서 단호하게 대중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부터 이런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실행하면서 2019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결의를 모아야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이전의 사회적 대화 기구(노사정위)와 다르다며 참여를 추진해 왔다. 이전에는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양보를 강요하려 했다면 경사노위에

서는 불평등 해소나 사회 개혁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경사노위도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대화 모양새를 띠는 목적은 탄력근로 확대하고, 임금 깎고, 연금 깎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대화, 타협, 양보, 고통분담”을 촉구하는 판이다.

만약 민주노총이 정부 정책 결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경사노위에 들어간다면, 결론이 뻔한 ‘답정너’ 식 대화 속에서 타협과 양보를 강요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2019년 1월 대의원대회 전에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 참가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불참과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맞선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부의 각종 개악을 방치하게 되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사노위 바깥에서) 개악을 방치하는 것과 (경사노위 안에서) 개악에 합의해 주는 것, 두 나쁜 선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 바깥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싸운다면, 쏫불 염원을 개무시하고 보라는 듯이 우경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라온 임금, 연금, 노동시간 등의 의제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이 걸린 문제다. 조직노동자들인 민주노총이 양보 강요를 거부하고 이런 조건을 지키고자 대담하고 단호하게 싸우는 것만이 전계급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 방침이 결의되도록 연대를 구축해 나아가자.

2018년 12월 20일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 대구민중행동, 평등노동자회, 현대차 금속민투위, 현대차아산민투위, 현대차 남양민투위, 현대차 노동전선(전주), 기아차 노동자의힘, 대전충북 활동가모임, 대우조선 현장중심의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건강보험 현장회, 철도노동자회, 현대차 전주 동지회